

‘생명존중·국민안전 최우선’... 광주 의용소방대 한자리

광주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시민 안전 지킨 의용소방대원 격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봉사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소방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의용소방대원 38명이 표창을 받았다.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대장 서방석 대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3명, 소방청장 표창 3명, 광주광역시장 표창 20명, 전국·광주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표창 11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주시 소방홍보대사 트로트가수 미스김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매년 3월19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 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복구, 지역 미래 산업 기반 다진다

2026년도 복구 4차 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글로벌 산업구조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복구(구청장 문인)가 지역의 미래 산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22일 복구에 따르면 ‘2026년도 4차 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5대 분야 2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예산은 총 31억 원이 투입된다.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복구는 올 하반기 중 ‘인공지능 기반 조례’를 제정해 AI 산업을 독자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전남대 혁신파크’가 차질 없이 조성돼 첨단 산업의 산학연 혁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건축비 일부와 진입도로 부지를 제공한다. /송현근 기자

국도교통부로부터 드론 특구로 지정받은 석곡동 인근 산지 18.6㎢를 관계 기관 및 기업에게 실증공간으로 제공해 드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복구 드론공원에서 연령별 드론 체험 프로그램이 연중 펼쳐지고 전국 단위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해 드론 문화 확산에 힘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AI 체험·코딩스쿨’, ‘AI-SW 창의융합 코딩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국가 AI 교육 수요 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AI·광융합 무역 촉진단’을 동남아시아로 파견해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연결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4차 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 “돌봄가족 하루 휴가 드립니다”

광주 최초, 대체돌봄·휴식비 지원... 지속가능 돌봄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 최초로 돌봄 가족에게 휴식 활동비를 지원한다. 서구는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공공돌봄 정책으로 돌봄자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서구는 ‘착한서구, 따뜻한 하루’라는 슬로건 아래 돌봄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대체돌봄과 휴식

활동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서구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1일 8시간의 대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자가 여행이나 문화체험,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식·문화 활동비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주민으로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3~4등급 대상자를 6개월 이상 돌보는 가구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돌봄지원과(062-350-49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석우 기자

“우리 동네 위험요소, 직접 알려주세요”

남구, 집중안전점검 기간 주민점검 신청제 운영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구청 담당 부서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규원이 발생한 노후 건축물을 비롯해 다중 이용시설, 공사장 주변 시설, 어린이 이용 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단속 민원,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및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이용하면 된다.

남구는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된 시설에 대해 현황 확인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현장 여건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걸

러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통보해 후속 조치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안전총괄과 ☎ 607-2954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 직원 대상 국민 비상대피요령·안보 교육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및 주민 안전 최우선 행정 구현

광주 동구는 지난 19일 3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 비상대피요령 교육과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공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직자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훈련 기간 동안 민방위 대비 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난과 비상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소 반복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과 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세계 물의 날... 광주시, 지속가능 물관리 다짐

광주환경공단서 기념행사... 평등한 물 복지 실현 약속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0일 광주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광주환경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매년 3월22일로 지정·선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UN이 정한 주제는 ‘Water and

Gender(물과 양성평등)’이며, 국내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이다.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이롭게 적시는 물의 겸손한 마음을 담아, 국민 모두의 평등한 물 복지를 실현하고 물의 가치를 발전시키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전남도,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 개설

전라남도는 전남·광주 시·도민 누구나 시민위원회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개설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정부가 특별재정금을 지원한다.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이다. 지금까지 전남도와 광주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었던 재정이 수백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이다.

포럼은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광장과 마을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설계해보자는 단호한 의지에서 출발했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기존 위원회

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지역에 살며 일상의 불편함을 느껴본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 키우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 ‘골목 상권을 살려달라’는 시민의 생생한 아이디어 등이 20조 원 규모의 ‘정책 마스터플랜’에 담길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정책 설계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포럼의 목표는 이전처럼 다리를 놓거나 건물을 올리는 SOC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27개 시군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염성호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